

투데이 칼럼

존 볼튼 해임

존 볼튼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해임되었다.

볼튼의 경질 기류는 이미 지난달 아프간 관련 안보 회담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시점부터 이미 백악관의 대세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대북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트럼프이니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가 북한 외의 적국과 교섭하는 일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트럼프는 대신 공약에서부터 아프간에서의 철군을 주장했으며 현재도 탈레반과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물론 '올바른 미군의 힘'을 믿는 볼튼은 이에 반발해 왔다.

이런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물론 오바마 시절의 핵합의를 폐기했다. (이 시점에서 동맹과의 결속을 더 중요시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교체됐다.) 문제는 트럼프의 생각은 오바마의 핵합의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트럼프의 핵 합의를 두고 싶은 것이었지, 군사력을 투자하여 이란을 묵사발로 만들고 친미 정권을 세우려 한 것은 아니었다. 볼튼은 여기서도 편지를 걸었다. 하산 로하니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돌이 빚어졌다.

이러한 볼튼의 강경 이데올로기적 방침은 국무장관 폼페이오와의 충돌을 통시에 야기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에서 CIA 국장을 맡으며 트럼프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다.(티 파티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 CIA 국장 시절부터 트럼프의 에스맨이라는 비판에 여러 차례 직면했던 바 있으며 미국의 적국이면서 협상 대상인 나라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트럼프에게 브리핑하면서 그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니 만큼, 같은 강경파이지만 무력 대응을 불사하는 볼튼은 결코 온건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볼튼의 행보는 결국 멀베이니 비서실장을 필두로 하는 백악관 보좌진 내에서 본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2019년 4월 블룸버그는 '볼튼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트럼프와 이견을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보내며 미 외교 안보라인 내의 견해차를 잡아낸 적이 이미 있다. 당시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 없이 재무부의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에 의해 곧 철회되었다. 이 당시 멀베이니가 볼튼에게 단독으로 다른 목소

리를 내지 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때문에, 폼페이오-볼튼-멀베이니가 합석하여 진행한 하노이 북미 회담이 엇박자가 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었다. 물론 단순히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볼튼이 트럼프의 눈 밖에 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볼튼과 트럼프, 폼페이오는 어느 순간까지는 유사한 정도의 강경도를 지녔으나 특정 시점부터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볼튼의 해임은 이런 총체적인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교 안보 라인인 엇박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 중 이제 남은 사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뿐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리아 철군에 항의하여 사임했고 힐러리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눈 밖에 난 끝에

경질됐다.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네오콘의 이데올로기 볼튼마저 사임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미국의 적국이자 협상 대상들을 상대하게 될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명확하지 않다. 의상에 의하면 브라이언 혹 이란 특별대표, 리처드 그레벨 주 독일 대사,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만 10명이 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있어 북한을 손 봐주려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북미관계에 일종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란의 로하니와 트럼프가 만나는 그림도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트럼프가 폼페이오와 같은 '에스맨'을 팔라 지명하려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외교는 때로는 동맹을, 때로는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사사건건 충돌을 빚던 볼튼과 매티스가 사임해 버렸으니 이제 트럼프의 생각대로 관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남았다.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상당히 통탄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대통령특사를 지명했다.

사설

인구 늘리기 대책 속고해야

전북도는 인구 늘리기 대책을 속고해야 했다. 어느 쪽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 그 쪽으로 일관되게 나아가겠다. 출산 장려 대신 다른 카드를 내놓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전북도가 어려운 때에 희망의 근거가 돼줘야 한다. 희망의 근거가 되어 주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세월만 흘러보낸다면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게 뻔하다.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전북도가 이번에 '제2의 고향 만들기'를 언급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모양인데 어찌 미덥지 않다. 출산 장려 정책이 먹혀들지 않으니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2의 고향 만들기가 인구 유입 활성화에 초점을 둔 도정 역점 과제라고 밝혔지만 말처럼 효과를 내 줄지는 두고볼 일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쪽 사정이 너무나 안 좋다보니 전북도가 그것에서 눈길을 돌려버렸지 싶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도는 힘을 내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올곧게 전진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정부가 군산을 위

기 특별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지만 피부에 느껴지는 효과가 미미하다. 나랏돈을 풀어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나타냈지만 난항의 연속이다. 고용 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계단지 군산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른 지역은 우리 전북의 경우보다는 낫다. 저번에도 투덜거린 바 있지만 경남 쪽만 해도 다섯곳이나 혜택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통영시와 고성군 등이 바로 그렇다.

전북도는 인구 늘리기 대책의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아는 것을 전북도가 모를 까닭이 없다. 인구 대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 고수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다. 그게 해결되면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늘 것이고 출산도 장려될 터이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쪽으로 인구도 유입될 것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마련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게 힘겹다고 해서 무나 안 좋다보니 전북도가 그것에서 눈길을 돌려버렸지 싶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도는 힘을 내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올곧게 전진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정부가 군산을 위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 말 뿐인가?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가 궁극이다. 전북도는 예전에 동부권의 발전과 관련해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이 말뿐선 날리기 같은 허망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이제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게 없다면 동부권 주민들의 인구 유출은 배가 될 터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 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을 말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동부권 발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키운만큼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말할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고 있다. 그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동부권 책임자들의 일하는 방식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라 지역 발

전이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항로 진안 군수는 예전 그대로 수감자 신세이고 장영수 장수군은 얼마전에 독한 구설수에 올라 민혹의 대상이 되었다. 사정이 그러니 발전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낼 턱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가 심한 지역인데 답답한 일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말뿐처럼 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저력이 없다면 그동안 있었던 전북 자존 선언이나 제류 찾기 선언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프 자존심일 뿐이다. 지난 8월말 당시까지 주민등록 인구는 182만 3882명이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해마다 하릴없이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폐일언하고 지난 수십년간 출생인구가 3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동서철도 건설 건을 포함해 동부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동부권 주민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기고문

장수군민에게 호소... 군민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작

한국이 세계 부자나라가 되니 일본은 한국 잘사는 꼴 배 아파 못 보겠다고 한국경제 목을 조이겠다고 달려든 것이 수출규제 조치입니다.

우리는 일본 상품 수입해 다 일본 돈벌어주며 사는 이웃인데 그 이웃을 적으로 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고 아속해 피가 역류하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일본제품 안사고 일본 여행 안가는 NO, NO제권>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웃입니다.

100년 전 우리 할머니들이 처녀였을 때 식민지 처녀라는 이유로 군에 끌려다 종군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한참 꿈 많은 아름다운 조선처녀들이 매 맞으며 몸을 유린당하고 종군위안부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끼 받친 조선의 처

녀들은 해방 후 '평화의 소녀상'으로 역사의 증인이 돼 돌아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이 감추려고애쓰는 일본의 진짜 얼굴입니다. 소녀상 앞에서 일본은 부끄러워 찡찡합니다.

수출규제를 걸고 한국에 경제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세계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등장하면 짐승 같은 일본의 죄상이 드러나 혼자서 찡찡 합니다.

일본의 죄를 세상에 증거 하는 소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전쟁을 이기기 위한 장수군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수 전 사회단체가 참여해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법 군민 추진 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일본과의 무역 전쟁의 의지를 조선처녀들의 평화의



고 경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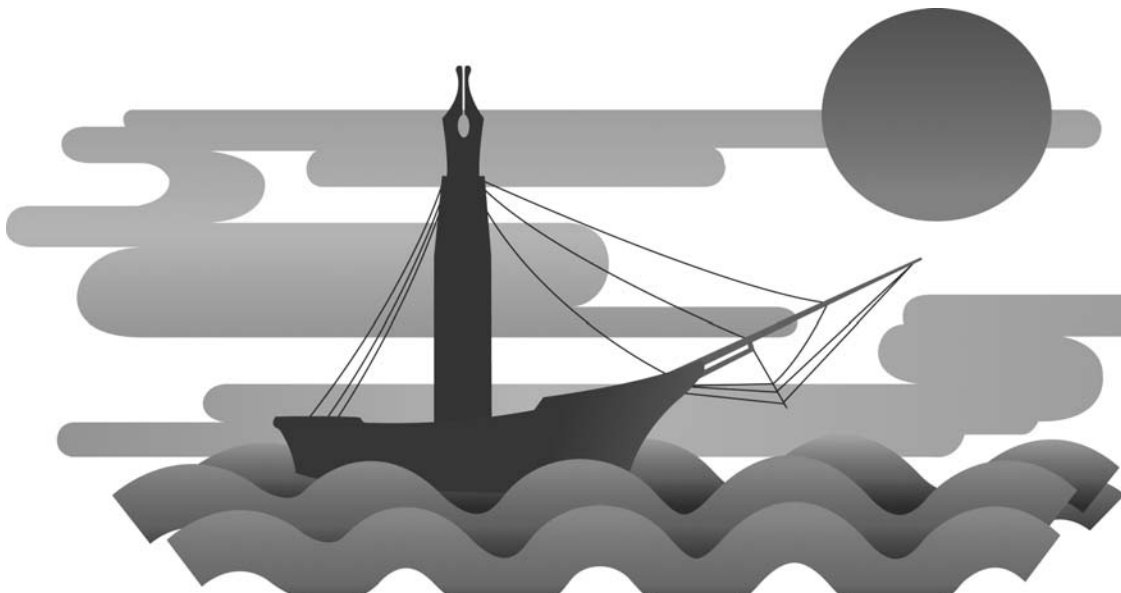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법군민준비위원회 회장

소녀상에 담아 극일운동의 상징으로 세우려합니다.

그동안 장수군민들이 노노제권운동에 보여준 뜨거운 애국을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열매를 맺었고 10월 1일부터 장수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장수군민 심의일반 모금을 시작합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